

3. 한중 경제관계 전망 및 시사점

대한중 경제관계는 중국과 기술격차 축소, 중국 경제의 내수주도 성장 등으로 인해 한국 측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이 없으면 중국 측의 일방적 힘의 우위가 가속화될 전망

- 과거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한 수직적 분업 하의 한중 경제관계에서는 한국이 규모의 열세가 있어도 이를 질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이 진행
- 반면 향후 중국과 기술격차가 사라지고, 한국이 중국 내수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구조가 될 경우, 한중 경제관계에서 중국의 우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 3대 경제권(美, EU, 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접한 중국시장을 대체할 국가는 없고, 또한 디스플레이선 위협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중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구조조정예 따른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를 잘 관리하여 향후 10~15년 후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중국이 경제고도화를 위해 매진하는 향후 5년이 중국에 대해 한국이 가치 있는 협력대상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평가됨

- 미중 사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의 입지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활용
- 독일과 프랑스라는 강대국 사이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구비하여 경제적 독자성을 유지하는 스위스 사례를 참고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

한중 경제관계에서 중국의 우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이 경제고도화를 위해 매진하는 향후 5년이 중국에 대해 한국이 가치 있는 협력대상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사드 도입논쟁과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 가능성 검토

최지영, 단국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책 제언

북핵 및 사드 사태 이후 약화된 한중관계 재건의 필요성

- 한중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
- 21세기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 경제안보의 핵심이해와 결부되며, 군사안보상 위협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하위변수 혹은 레버리지로만 다루서는 안 됨
- 한국 외교의 최대과제는 전략경쟁을 본격화한 미중관계의 한 축이 되기보다는 그 적정성을 찾고 독자적 공간을 개척하는 데 있으며, 이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필요
- 약소국인 한국은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적·냉전적 사고를 넘어, 중견국가로서 명민하고 창의적 외교를 통해 안보적 장애 요인의 타개 추진. 평화와 상생의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함

한중 관계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

한중 경제 협력은 한중 전략협력의 기초라는 인식하에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

- 한중 간 공통분모를 찾기가 가장 용이한 경제협력 강화에서 관계복원의 첫걸음을 시작
- 사드사태에서처럼 경제보복 또는 안보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
- 정부간 기구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매개로 한 경제계 간 실질적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
-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사례 창출에 주력. 예를 들어, 양국 기업의 관심사인 新 산업에서 글로벌 표준 공동 개발, 철강, 조선 등 과잉생산 업종의 중복투자 조정 협의 등 현장 중심의 협력 추진
-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시적 협력도 강화: 한중일 FTA와 RCEP 등 지역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 AIIIB와 일대일로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 구체화
-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경제전문가 배치

한중 경제 협력은 한중 전략협력의 기초라는 인식하에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

한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설립 및 정례화

- 한중간에 북한, 대미 관계 등 사안에서 일정하게 시각차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것이 갈등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위기관리 기제 수립이 중요
- 정상회담 뿐 아니라 한중 전략대화를 중미간 S&ED와 같은 상시적 한중 전략 및 경제대화회로 확대개편 및 정례화하고 이를 상시적 대화채널로 활용
- 경제협력에서 나아가 통일, 안보 부문 등 전방위로 양국 간 실질적 교류 및 신뢰를 강화

문제 제기

1. 한중관계의 위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도입을 추진한 이후, 역대 최고수준이라던 한중관계가 급전직하

-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에 따른 사드 배치 검토" 를 지시(1.13)하였고, 이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급진전
- 한국 내 사드 배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였고, 한국정부는 중국의 우려에 반박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
-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심지어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시사.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게임에 한국이 미국에 편승하여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인식함
- 반면 한국 정부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주장
- 한중 양국은 사드배치 문제로 소통과 이해 대신 상호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됨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 우려가 확산

-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일본, 필리핀 등과 같이 경제보복을 취할 경우 대중국 무역집중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골자
- 2015년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1,371억달러, 26%)이며, 제3위인 홍콩(304억달러, 5.8%)까지 합산하면 한국 대외수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2위 美(698억달러, 13.3%); 4위 베트남(277억달러, 5.3%); 5위 日(256억달러, 4.9%)
-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은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한국에 치명적인 손상을 안겨줄 것을 우려

2.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점검

일반적으로 경제보복 혹은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안보적 위협에 대해 비군사적 대응 즉 실물경제와 금융 등 경제적 조치를 통해 상대국의 태도변화 및 자국의 안전보장을 이뤄내는 것을 의미

- 세계화 체제 하에서 경제제재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재국의 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제3국도 제재를 참여하는 UN 등 국제기구나 다자간 형태로 주로 진행
- 단, 세계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 및 달러패권을 보유한 미국은 단독으로도 특정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수행하나, 이 경우 동맹국과 제3국의 참여를 유도(triadic sanction)하여 국제제재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할 경우 가능한 정책수단은 아래 5가지로 예상

- 지금까지 중국이 외교안보적 사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사례(일본, 필리핀, 노르웨이 3개국)와 WTO 등 국제규범을 감안할 때, 對韓 경제제재 수단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
 - 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 위생검사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 강화
 - 〉 중국은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를 병충해 등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 및 폐기처분 한 바 있음 → 김치나 우유 등 한국산 농식품이나 화장품 등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중국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전략게임에 한국이 미국에 편승하여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인식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자 한국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보복 우려가 확산

중국이 외교안보적 사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사례(일본, 필리핀, 노르웨이 3개국)와 WTO 등 국제규범을 감안할 때, 對韓 경제제재 수단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

- 〉 공산품의 경우, 과거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한국산 부품 및 중간재의 통관을 지연하여 중국내 한국 전자나 자동차 주요 공장의 조업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② 관광 상품 판매중단,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 〉 2015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0만 명(전체 외국관광객 45%)을 돌파하였으며, 1인당 평균 2천불(외국 관광객 평균 4백불) 총 14조원(120억불)을 사용
 - 〉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1천만), 아시아 신흥국(5백만)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는 80조 5천억 원, 부가가치는 37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명목 GDP 1.7%, 약 105만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추정됨
- ③ 관영언론 등을 통한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 등
 - 〉 과거 중일 간 영토 분쟁 시 대규모 반일시위와 함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 상가 등에 대한 폭력시위도 발생한 바 있음
 - 〉 현재까지 중국 현지 정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
- ④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동, 환경, 조세 등의 표적 단속
 -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23,000개(2013년 기준)가 넘고,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누계 521억불(이는 수출입은행에 신고 된 수치이고 실제 규모는 몇 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
 - 〉 단, 외자기업은 중국 대외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를 꺼리게 되는 등 중국경제에도 부담요인
 - 최근 중국정부가 한국의 LG와 삼성 등 외국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 것을 경제보복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 보다는 중국 배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⑤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
 - 〉 2016년 2월말 기준,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채권 규모는 17조 5천억원(18.1%)으로 전체 국가순위 중 1위
 - 〉 중국자본이 일거에 한국 국채를 매도하는 시나리오는 대한국 보복수단 가운데 가장 위협적임: 최악의 경우, "국채매도→ 한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위기 심화 + 부동산 폭락 → 금융위기 발발" 도 가능
- 상기 경제제재 수단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사용이 용이한 것은 비관세 장벽 강화와 관광객 감소 등이고, 그 다음 반한감정, 한국기업 단속의 順을 예상할 수 있음
 - 〉 한국 투자 자본 철수는 영향력이 너무 커 매우 신중할 것으로 예상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은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대한국 경제적 제재보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한 문제해결로 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판단

- 영토분쟁 등 중국의 핵심이익과 충돌하는 일본, 필리핀과 달리 한중 간 사드논란은 기본적으로 미중관계 내 이슈로 파악
- 〉 즉, 사드문제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ward Asia)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MD 체제에 편입시켜,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
- 〉 단,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책임 있는 대화상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착화될 경우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의주시할 필요
- 출혈을 감수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할 경우, 일본 및 필리핀 외에 추가로 역대 중견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다대
- 경제보복으로 한국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제 정책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은 공산당 창건 백주년(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강(小康) 사회의 달성을 위해 동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6.5% 이상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상정

용이한 것은 비관세 장벽 강화와 관광객 감소 등이고, 그 다음 반한감정, 한국기업 단속의 順을 예상할 수 있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책임 있는 대화상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착화될 경우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